



28개 분과학회 평가 근거 법 마련 올해 학술활동 내용부터 평가키로 치협 정기이사회

앞으로는 치협 인준 분과학회도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치협이 인준한 뒤 지지부진한 활동을 벌여도 질 관리가 되지 않았던 단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8월 20일 치협 대회이실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여개의 안건을 토의하는 등 현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의학회 회칙(안)을 논의, 이사회 업무 중 '분과학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치협 정관 제63조 및 치의학회 회칙 제7조에 의거 각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분과학회 평가에 대한 근거가 법에 마련됨으로써 치협 산하 28개 분과학회는 앞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 학술활동에 대한 내용부터 적용해 분과학회로부터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2014년 초에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일단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평가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내년 초에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점수가 미달한 학회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 이 안건이 각 시도지부와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지부장회의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쳐는 등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에서 올라온 운영위원회 신설, 연구부서 및 연구원 관련규정이 포함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은 정책이사 및 관련 이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구를 수정해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칙 개정 및 학회명 개정의 건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차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 심의 결과 ▲제15차 중국구강의학회 학술대회 및 China Dental Show 참가 ▲대한여치과외과사회 보수교육에 대한 보고사항도 진행됐다.

김세영 협회장은 "(집행부 임기가) 8개월이 남았는데 회원만 보고 더욱 열심히 하면 하늘도 우리 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초치일관 회원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자"고 말했다.



진료실 폭력 근절 "의료단체 뭉쳤다" 의료인 안전성 담보 로드맵 설정 시발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치협 등 5개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의사 살인미수, 임신한 여의사 폭행 사건 등 최근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사고와 관련 주요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의료현장의 안전성 담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운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의료단체는 8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5개 의료단체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이나 의료시설 파괴행위에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 단위에서 일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폭력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은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폭력을 경험한 의사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최근 통계 자료가 뒷받침 한다.

5개 의료단체는 진료공간 내 폭력행위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성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환자진료 질 향상을 위해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개선 기미가 없는 저수가 제도와 통계 위주의 관치의료와 있어 의료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에서는 환자에 의한 폭행이나 절도,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자치과의사가 많은 치과 의료 현장의 안전성 담보가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인의 권익보호 등 진료환경 전체문제 개선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이 설정돼야 하며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역시 "진료실 폭력근절을 시작으로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문제, 저수가 문제 등 진료환경 전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력 근절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OE 재허가 유통 최선” 치협 자재·표준위 “회원 불편 최소화 모색”

일부 치과용 시멘트 제품의 수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8월 19일 열린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용시멘트인 ‘Zinc Oxide Eugenol(이하 ZOE)’의 수입 중단과 관련 “재허가 유통되도록 (해당 업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1998년 생물학적 검사 없이 시험규격만 기록된 상태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실시된 2000년 이전 품목 재허가 과정에서는 한천중층법 실험 결과 일부 독성이 검출돼 허가가 취소됐다. 의리기기법 77조 3항 시행규칙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제품 공급이 지연돼 왔다.

현재 치협과 해당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독성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만큼 시멘트로서의 물리적 성질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허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특히 징크아세테이트(경화제), 징크옥사이드, 유지놀 등을 패키지로 묶어 허가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도 우리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패키지로 수입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 구강장치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적인 개념은 기공물이고 사이즈별로 규격화해 허가된 특정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치과에서 시술되는 코골이 장치는 기공물로 치과를 통해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한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코골이 치료에 대한 치과계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인단 ‘수작업’으로 선출 선호 정기대의원총회·협회장 선거 동시 진행 “객관적 선거제도 만들 것” 의지 재확인 정관특위 산하 소위 2차 회의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소위는 선거인단체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전체 표본집단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기대의원총회와 협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힘이 실리고 있다.

특별소위가 7월 15일 초도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 5일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등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별소위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한 가운데 선거인단 확정 방법을 포함해 선거 일시,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준일, 선거인단, 예비 선거인단 선출 및 공표 일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거인단체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인단 확정 방법의 경우 그동안 논의된 바와 같이 전산 즉,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과 수작업을 이용한 방법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

을 파악한 결과, 선거인단을 직접 수작업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원들은 “기초적인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선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수작업을 통한 선거인단 선출을 선호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와 협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과 분리해서 치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별소위에서는 비용 절감 및 선거직후 대의원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정기총회와 협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 명단과 선거인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들을 제외한 회원 중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방안이 힘이 실렸다.

이 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입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향후 선거운동이 진행될 경우 돈 안드는 선거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어 갔으며, 입후보자와 선거인단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